

“매듭 풀 전환점” vs “오염수 방류 용인”...한일회담 공방

국힘 “국민 안전 요구 당당히 했다” 민주 “日 광고 대신하는 하청 정부” 엇갈린 평가 내놓으며 비난전 가열

여야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전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비난전을 펼쳤다.

국민회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회의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수 정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윤 대통령이 내놓은 요구를 상세히 나열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시다 총리 반응에 대해서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인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해석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한 일본 측 공식 답변이 없었음에도 전부 수용했다고 보는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사실상 다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양국 정상 의지를 확인한 만큼 더 이상 고담 선전선동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야당 공세 차

단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화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며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이냐”며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핑계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됐다”고 따졌다.

정춘숙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를 일본 정부의 선의에 기대 해결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방류를 승인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 전달이 충분히 됐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도 안 돼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정외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실망 그 자체”라며 “국민은 누구 믿고 의지하란 말인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일본만 좋은 일 시켰다. 일본의 방류를 국제적으로 용인해준 것”이라며 “정상 회담이,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를 서는 장이 됐고 국제적으로 ‘호구 인증’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의 3대 조건을 내건 것엔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안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무슨 요구 조건인가”라고 일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내외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만난 윤 대통령 “IAEA 발표 존중”...오염수 방류 3개 항 요구

日 외무성 오염수 발언 공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 달 만에 다시 거론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던 윤 대통령이 오염수 문제를 재차 꺼내는 것이다.

그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고, 정부 차원 대응을 지켜보던 윤 대통령이 ‘정상 외교’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세 가지는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측과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등이다.

‘우리 전문가 참여’는 IAEA가 방류 현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 개설한 현지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review)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

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오염수 관련 발언은 공개 모두발언이 아닌 비공개 회담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 요청 사항도 정상회담 뒤 우리 대통령실이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졌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이 부분은 소개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윤 대통령 요청 사항을 소개하지 않고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입장 설명이 있었다. 두 정상은 당국 간 계속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본적인 내용을 전했다.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 답변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발사 관련 긴급회의

한국도 참석...외교부 “반복된 결의위반에 안보리 단합대응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3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연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 대표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ICBM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가 내일(1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의 요구로 이번 회의가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의 공조 하에 회의 소집 요청에 동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 한국도 이해당사국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반복되는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와 관련해 마-일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이 미사일은 신형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미사일은 고도 6000km로 사거리 1000km를 4491초(74분51초)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에도 화성-18형을 발사한 적이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공해상 비행과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 등을 트집잡으며 지난 수일간 여러차례 비난 담화를 내놓은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당정 “보건의료 파업 법과 원칙 따라 단호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비상 대책 마련

국민회의와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협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임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겠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환자 전원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대해 필요한 인력 지원과 인근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를 향해서는 총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는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19년만에 총파업이고 현장에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